

2021년 12월 22일 14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기획재정담당관 과 장 박선우(044-201-1311), 서기관 이강석(1317) / 제공일: 12월 22일(총 8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2022 정부 업무보고

「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,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」

- 농업·농촌 경제회복 체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행 박차 -

- ◆ 농촌경제 안정과 포용성 강화로 농식품 분야에 경제회복의 온기 확산
 - 발작물 기계화(4개소), 이차보전 금리인하 연장, 비료가격 상승분 80% 할인 공급, 수급조절 약정물량 확대(17% → 20), 계란 공판장 경매 개시 등 추진
 -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확대,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, 여성농 특수검진(9천명)
- ◆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·농촌 조성
 -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두 완공(4개소), K-스마트팜 수출패키지 지원, 농식품 전용항공기선복 추가 지원, 농촌공간계획 기반 정비 지원(45개 시군) 등 추진
- ◆ 농업·농촌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
 - 탄소저감 논농사·가축사육 모델 개발, 공공형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(환경부 협업), 농촌 RE100 시범모델 개발(4개소), 영농형태양광 표준 마련 등 추진

【 문재인 정부 주요 농정성과 】

- ① (농가소득 4,500만원 달성) 공익직불제 개편 및 소농직불금 도입, 재해 대책비 현실화 등 경영위험 관리를 통해 농가소득 사상 최고 달성
- ② (농수산물식품 수출 100억불 돌파) 농식품 전용항공기·선복 확보로 물류 애로 해소, 해외 온라인 판로 확보 등을 통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중
- ③ (스마트 농업 확산)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스마트팜 교육·경영 실습 연계 지원 등 스마트팜 보급 확산('17년비 스마트온실 62%↑, 스마트축사 492↑)
- ④ (K-농업으로 국격 향상) 식량위기 개도국에 쌀 원조('18~ 5만톤/년)로 30여 년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 전환, 가축질병진단기술스마트팜 등 우수한 농업기술 전수

-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'농식품부')는 12월 22일 「'22년 농식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.

(1) 지난 4년 반의 농정 추진성과와 평가

- 국민체감 정책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, 공익직불제 도입·안착과 수급안정 및 경영위험 관리 등으로 농가소득은 사상 최고치인 4,500만원을 달성하였다.
 - 특히, 쌀과 대농 중심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개편, 밭과 논·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, 중소농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였으며,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뢰를 높이고 있다.
- 식량원조, 해외 농업협력, K-푸드·K-스마트팜 수출 등 'K-농업'의 확산을 통해 국격을 향상*하였다.
 - * WFP 사무총장은 개도국 식량위기 완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특별히 사의 표명('20)
 - 농수산물식품 수출은 처음으로 100억불을 돌파했으며,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해외 스마트팜 시범온실을 조성하여 스마트 농업 확산 및 해외진출 계기를 만듦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였다.
- 선제적이고, 과감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등 가축질병 확산을 최소화했으며,
 - 농지를 필지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행정 체계를 재정비하고, LH투기 사태를 계기로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 억제에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.

▲ 농가소득: ('17) 3,824만원 → ('18) 4,207 → ('19) 4,118 → ('20) 4,503('16년 대비 21.1%p↑)
▲ 0.5ha 이하 농업인·농가 직불금 수령액 비중: ('19) 10.6% → ('21) 24.3(개편전 대비 13.7%p↑)
 밭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: ('19) 16.2% → ('21) 28.1(개편전 대비 11.9%p↑)
▲ 농수산물식품 수출액: ('17) 91.5억불 → ('18) 93 → ('19) 95.3 → ('20) 98.7 → ('21p) 113.7
▲ 양돈농장 ASF발생: ('19)14건 → ('20)2 → ('21.11.)5(모두 수평전파 없이 차단)

(2) '22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

- 농업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,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등 구조적 측면에서 농업·농촌에 변화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,
 -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변수, 투입재 가격 상승, 재해위험 증가 등 농촌경제에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이다.
- 이에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 되도록 뒷받침하면서, 디지털 전환·탄소중립 등 농업·농촌의 구조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갈 계획이다.

① 농촌 경제의 안정과 포용성 강화

- 인력 부족,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여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할 계획이다.
 - 농촌인력 중개를 강화*하고, 지자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·고용하여 지역 농가에 단기근로 탄력 공급하는 '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'을 추진하여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한다.
 - *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: ('21) 130개소 → ('22) 155
 -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·마늘 주산지 중 4곳에 대해 '기계화 시범모델'을 적용하여 인력수요 절감도 병행한다.
 - 비료 등 농기자재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관리하고, 원료구입 자금 지원, 비료할인 공급 등을 통해 업계와 농가 부담을 경감한다.
 - 농가에 대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%를 할인하여 공급하는 한편, 금리인하를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.
 - 비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(2천억원 → 6)한다.

- 재해위험 수준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시·군 단위에서 읍·면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대비를 내실화한다.

□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안착시키고, 식량안보 기반 강화로 안정적 경제회복을 지원한다.

- 실측데이터의 정확도*를 높이고, 관측데이터의 민간 개방·활용을 촉진하여 수급 예측을 정교화하는 한편,

* 드론조사 결과 및 경작신고(자조금 단체) 면적 등과 실측조사 결과 간 교차 검증

-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('21: 23개 → '22: 26), 경작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기능을 뒷받침한다.

- 계란은 전국 2곳의 공판장에서 경매를 개시하여 계란 시장가격이 형성·공표될 수 있도록 가격결정체계를 개선한다.

- 밀·콩 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하고, 논콩 단지에는 배수개선(3개소)·공동선별비 지원(20천톤) 등 연계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하여 국내 생산 기반을 지속 확충하면서,

- 쌀 공공비축 매입 확대(35만톤 → 45), 국산 밀·콩의 매입 물량을 확대하는 등 식량 비축도 강화해 나간다.

* 국산 밀/콩 매입 물량(천톤): ('21) 10/25 → ('22) 14/25

□ 저소득층과 학생·임산부 등 생애주기별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확대*하는 한편,

* 농식품 바우처는 대상 지역을 군·도농복합시에서 대도시까지 확대, 임산부 꾸러미는 대상 시·도를 11개에서 16개로 확대(과일간식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명 지원)

-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(만 65세 → 60), 여성농업인 9천명 특수건강검진 등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.

- 또한, '도농상생형 직매장' 확대,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산 등 농촌 시·군과 도시를 연계한 방식으로 로컬푸드 모델을 다각화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기반을 강화한다.

②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·농촌

-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, 스마트 농업 확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.
 - 우선, 핵심 인프라인 ‘스마트팜 혁신밸리’ 4곳을 모두 완공*하여 청년농들에게는 교육 기회와 임대팜을 지원하고, 스마트팜 기업에게는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본격 제공한다.
 - * 김제(11.29)·상주(12.15) 2곳은 기 완공, 밀양·고흥 2곳은 '22년 상반기 완공 예정
 -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운영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「(가칭)스마트농업육성법」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.
 -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인 ‘K-스마트팜’의 해외 수출거점을 기존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에 추가 조성하고,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‘스마트팜 수출지원팀’을 구성하여 시장조사, 바이어 발굴·매칭 등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.
-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범거래 품목·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축산물 온라인 시범 경매도 개시한다.
 - * ('21) 양파·마늘 도매시장 거래량의 5% → ('22) 10% + 주요 채소·과일
 - '23년에 전국단위 통합 온라인거래소 출범을 목표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한다.
- 개도국 식량 직접 지원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, 해외 고품질 농식품 시장을 중점 공략하여 K-농업의 지평을 확대한다.
 - 특히, 딸기·포도 등은 농식품 수출 전용항공기·선박을 추가 확보하여 적기에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- **농촌공간계획¹⁾과 농촌협약²⁾에 기반한 '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'를 본격 추진, 공장·축사 등 농촌 마을 주변의 유해시설을 이전·집적화하는 정비 사업을 지원하여 살고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한다.**
- 1) 농촌의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공간을 구획화함으로써 농촌을 계획적·체계적으로 개발하고,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제도
- 2) 농촌재생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-지자체 간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, 농촌공간 정비, 생활권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연계하여 패키지 지원
- 귀농·귀촌 관련 정보,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도 개시하여 귀농·귀촌 탐색단계부터 정착 이후 적응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.
- **농가, 계열화사업자 등 실질적 방역주체의 책임성 강화로 방역역량 향상을 유도하여 선제적인 가축방역 시스템으로 개선한다.**
- 현재 산란계 농장에 대해 시범적용하고 있는 질병관리등급제[※]는 적용 축종 확대를 검토하고, 계열화사업자에게는 계약농장 방역 점검·시정조치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여 계약농가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.

※ 방역관리 수준이 높은 농가에 대해 예방적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

3 농업·농촌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

-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체계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,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.
- **농업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논물 관리, 가축 사육방식 등에서 기존 관행적 방식을 개선하고,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켜 나간다.**
-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대해 선택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.

□ 환경부와 협업*을 통한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확대하는 한편,

* 우리부(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)와 환경부(폐열이용 등 주민편의시설)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,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 등 주민친화공간을 조성

○ 소 분뇨를 고체연료화하여 제철소·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타산업분야 이용을 확대하여 가축 분뇨의 처리방법을 개선해 나간다.

○ 농업 생산·유통·가공시설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, 주민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등 농촌 마을 RE100 모델(4개소)도 발굴한다.

□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, 용수관리 스마트화*도 지속 추진한다.

* 재해예방계측(총 1,353개소 대상): ('21) 49.2% → ('22) 64.0 → ('25) 100

□ 김현수 장관은 “2022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정상화를 도모하면서,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”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,

○ 마지막까지 현 정부의 농정 성과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노력하고,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이행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별첨> 「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」

1. 농촌 경제가 안정되고, 농업·농촌의 포용성이 강화됩니다.

안정적 농업인력 확보	신용·자금지원 강화	재해대비 강화
■ 농촌인력증개센터 확대 : '21년 130개소 → '22년 155 ■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(2~3개소)	■ 농신보 출연금 확대(1,300억원) ■ 이차보전 금리인하(2.0~2.5% → 1.5) 조치 연장 시행(~'22년 말)	■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요율 세분화 : '21년 시·군 단위 → '22년 읍·면 ■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
수급 안정	식량안보	
■ 농산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 : '21년 16개 → '22년 19 ■ 채소류출하조절시설 확충 : '21년 2개소 → '22년 5	■ 밀/콩 전문생산단지 확대 : '21년 39/83개소 → '22년 51/120 ■ 국산 밀 비축용 매입량 확대 : '21년 10천톤 → '22년 14	■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('21년 말 → '22년 말) ■ 비료원료 수입선 다변화 : 중국 → 중국, 중동, 동남아 등
농촌사회 포용성 강화	도·농상생 기반 강화	
■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: '21년 만65세 이상 → '22년 60 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(9천명) ■ 외국인 근로자 건보료 지원(28%)	■ 도·농 상생형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: '21년 2개소 → '22년 5 ■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산: '21년 1곳 → '22년 3	

2.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·농촌을 만듭니다.

스마트 농업 확산	디지털 유통 촉진
■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(상주, 김제, 밀양, 고흥) 모두 완공 ■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청년 육성 : '21년 580명 → '22년 780(누계) ■ 해외 K-스마트팜 수출 거점 추가 조성 : '21년 1개소(카자흐스탄) → '22년 2(+베트남)	■ 온라인 거래소 거래 물량 확대 : '21년 양파·마늘 도매시장 거래량의 5% → '22년 10% + 주요 채소·과일 ■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 실시(도매시장 4개소)
K-농업의 지평 확대	살고싶은 농촌 조성
■ 식량위기 국가에 대한 식량원조 추진(6개국 쌀 5만톤, 계속) ■ 스마트농업 협력 사업 분야 확대 : '21년 작물재배업 → '22년 축산 분야까지 확대(베트남 양돈) ■ 해외 온라인물 한국식품관 확대: '21년 6개소 → '22년 11(누계)	■ 농촌 정책을 연계·패키지 지원하는 '농촌협약' 확대 : '21년 32개 시·군 → '22년 49(누계) ■ 농촌공간정비 지원 확대: '21년 5개소 → '22년 45(누계) ■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확대 : '21년 88개 시·군 → '22년 95

3. 농업·농촌이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앞장섭니다.

농업 분야 탄소배출 저감	농업·농촌 에너지 이용구조 전환
■ 탄소배출 저감 최적 소 사육모델 개발 착수('22~'24) ■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지정(신규 20개소) 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산: '21년 25개소 → '22년 65	■ 공공형(지자체)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운영(1개소) + 환경부 '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'과 연계·협업 ■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업·농촌 RE100 모델 발굴(4개소)
농촌 재생에너지 확산	농업기반시설 기후변화 대비 강화
■ 영농형태양광 표준모델 및 설계도 마련 ■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(누적) : '21년 4.77GW → '22년 6	■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(전체 대상: 5,842개소) : '21년 개보수 대상 수리시설의 69.8% → '22년 72.7 ■ 재해예방계측 설치(전체 대상: 1,353개소) : '21년 설치 대상 시설의 49.2% → '22년 64.0